

# 福祉社會와 看護



朴 宗 溟

(한국개발연구원)  
(보건기획단장)

## I. 序 言

저희들은 최근에 와서 복지니, 복지사회니 또는 복지국가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함축하고 있는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든가 또는 듣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Webster 영어사전을 찾아 볼것 같으면 복지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Welfare is the state and condition of health, happiness, comfort; wellbeing, and prosperity.」 즉, 복지라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안녕하고 번영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것 같으면 복지라는 개념의 근원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불란서혁명이 1789년에 부르짓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속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Bentham의 실리주의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기본개념을 처음으로 구상해낸 독일의 비스말크재상과 영국의 Beveridge경의 철학 속에서 복지의

이념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산업과 기본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영국의 Fabian Society의 기본원리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의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볼때 복지란 결코 정부가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고용주가 피용자의 봉급수준을 올려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각자의 마음이 집과 사회전체의 자세에 달렸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두 용어가 각각 의미하는 바 차이점을 구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회가 복지에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지사회란 국민들이 복지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부의 시책과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와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저항과 마찰과 좌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복지사회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복지국가가 형성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에 앞서 먼저 복지국가가 되려고 발버둥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결국에 가서는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이 겪는 바와 같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파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 II.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 2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연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난한 농업국을 벗어나 자립번영공업화의 경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期間은 생산과 소득의 급속한 성장과 광범한 경제구조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성장을 약 10%를 계속 성장해 왔으며 1인당 GNP는 경상가격으로 볼때 1962년에는 90달러에도 못미치던 것이 1980년에는 약 1천7백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실질가치로는 이 기간에 3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생산과 소득수준이 급속한 상승과 함께 경제구조상 심한 변화가 따랐습니다.

즉, 근대적인 제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된 반면, 전통적인 농수산부문의 비중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발전략의 요체는 수출주도에 의한 고도경제성장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반 지원조치가 수출증대의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1962년 5천 5백만불에서 1980년 2백억불이상으로 급진장하였습니다.

경제구조상의 변화는 인구와 고용의 구성면에 있어서도 심한 변화를 수반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가족계획의 결과로 거의 3.0%선에 육박하던 인구증가율이 1.6%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간 경제적 기회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매우 심한 도시화 현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장되어가는 도시에서의 보다나은

취업 및 생활기회의 증가는 농촌환경의 후진문제와 함께 이농현상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인구는 전체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주도 도시지향형의 개발전략은 환경문제의 야기와 함께 도·농간 그리고 사회계층간의 불균형을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급속한 도시지향형의 산업개발은 교통체중, 주택난, 과밀교실, 대기오염,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가정생활의 긴장 및 각종 공공「서비스」의 부족현상 등 선진국의 대도시가 야기시키는 전형적인 여러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수용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된 결과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공「서비스」는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만족할만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동안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0%에서 약 57%로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어느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더우기 일반적으로 농촌가구가 도시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원과 취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도·농간의 명목상 소득비교에는 나타나지 않는 보다 폭넓은 실질소득격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인구의 상당부분은年少자, 노령자, 영양실조자, 저교육 수준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들 중의 다수는 보건위생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건강관념이 희박하며 신체상의 질환을 제때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最近 세계은행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균등한 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약 200만명이 절대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강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긴급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회보장은 국가발전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정책은 복지사회 증진을 위한 개발전략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신생공업국을 자랑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안보적 측면에는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만 했고 개발전략은 수출주도에 의한 고도성장과 고용증대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사회적으로는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경노의 미풍과 가족간의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공산체제를 압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도 보다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가고 있으며, 또한 개발전략으로서 추구해 온 고도성장도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은 될수 있어도 결코 충분조건은 될수 없다는 반성이 최근 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貧困人口數가 계속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相對貧困人口의 비율은 1970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經濟成長에 따른 雇傭의 創出과 所得의 誘發이 貧困問題를 어느정도까지는 해소할수 있으나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자, 연소자, 장애인 등의 人口階層에 대한 생활보장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最低生活를 보장받을 수 있는 所得保存(income maintenance)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비율이 격증됨에 따라 가족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여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핵가족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간의 연대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상호부조 정

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구의 노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밀집된 주거환경과 복잡한 생활양식은 정신계질환, 공해, 돌발사고 등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한 폐질자, 심신장애자, 사망자 및 유족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들은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세계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회보장유구를 증대시키는 또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총사자비율의 감소와 함께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부문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사회보장의 제도적 보호를 더욱 필요로 하게되는 것입니다.

산업을 공업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이로인한 실업발생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이 날로 배가됨에 따라서 바야흐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의 정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충,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또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자랑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서구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저지않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진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며 국민각자의 자주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정책입안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미리부터 장기적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이에따라 단계적으로 계획·실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있는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보다 새롭고 종합적인 경제, 사회개발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2년 제 4차 개발계획에서 그리고 일본은 1970년 신 경제사회 발전계획에서 각각 경제성장 위주 정책에서 사회적 형평과 복지증진을 강조하는 사회개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완벽한 국가 종합계획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개발전략의 추세와 시대적 요청, 그리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계획도 그 내용과 체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아집니다.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화있는 개발전략이 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Ⅲ. 福祉社會를 向한 앞으로의 課題와 戰略

산업의 공업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택, 보건, 교육, 사회복지등 사회개발분야를 개선하고 부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자원조달이 큰 문제가 되겠는데 국가재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회개발사업은 공공성을 띄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민간차원의 보다 폭넓은 활용도 있어야 하겠음니다만 정부부문내에서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이와 관련

된 자원의 배분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韓國開發연구원이 작성한 長期 經濟社會발전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中央정부의 일반財政규모는 GNP對比 18%에서 1991년에는 24%선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財政규모의 팽창과 아울러 財政構造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앞으로 財政政策의 基調 전환은 財政支出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修正과 變動을 예고케 하고 있습니다.

즉, 財政支出의 目的別 配분에 있어서 教育費, 保健醫療費, 그리고 社會保障費 등의 社會福祉費가 크게 증가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 經濟開發費의 支出比重은 상대적으로 多少 低下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公共部門의 投資支出에 있어서도 住宅 上·下水道, 公園 및 綠地帶造成 등 生活環境 施設擴充에 역점을 두는 한편 一般 產業發展을 지원하기 위한 直接投資의 비중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일반재정 총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사회개발비의 비율은 24%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균형있는 경제사회개발을 이룩하자면 1991년에 가서는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34%선까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율도 어느정도 증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퍼텐셜」이 상당히 변모되어 1980년대 말경에는 오늘날의 선진국과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앞으로 사회개발의 상대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10년간에 걸쳐 효과적인 사회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주택부문에 적지 않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거는 의·식과 함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수요의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도

시화 추세와 핵가족제도의 보편화·경향으로 인한 가구수의 꾸준한 증가를 감안할 때 향후주택의 신축 및 개축을 위한 소모 투자액은 막대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난 해소와 농가주택의 개량이라는 주요당면과제에 접근하자면 공공투자의 역할이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빈곤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주택,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외에도 교육,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인데 이것은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낮은 문맹율과 높은 교육수준은 과거의 상당한 노력으로 얻어진 훌륭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도면에서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편중은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를 조장하는 부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교육투자는 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교육기회를 확장시키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심신장애아교육, 과밀학급의 해소, 의무교육의 확대, 교육의 질적 향상, 직업·기술교육의 강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유구를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심신장애자, 생활무능력자 등 빈곤한 취약인구계층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는 근래에 이르러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점

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보호내용이 미흡하여 앞으로는 국민생활의 최저수준, 즉,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보호수준이 유지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또 부조재원의 조달방법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자나 영세민들의 기본수요(basic needs)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모자보건, 안전급수, 위생환경, 영양급식, 교육, 보건의료 및 기타 복지「서비스」등을 포함한 연관성있는 종합적인 「서비스」의 전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인구구조로 보아 인구의 노령화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경제·사회구조가 급속도로 공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 80년대에는 노후의 생활보장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약 240만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령자수는 1991년에 3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8%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은 1980년대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의 증가현상은 근래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1920년대만해도 30세 남짓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남자의 경우 63세, 여자는 6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수명의 연장은 그만큼 우리 사회도 현대화를 지향하고 또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수명의 연장만으로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를

위에서는 노령연금제도의 완비, 퇴직정년제의 개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 장수론 대비하는 자세와 사회적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불구자 또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소득보장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빈번히 발생하는 직업상 또는 비직업상의 사고로 인한 소득의 상실로 말미암아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장기적인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즉, 불구 및 장애에 대비하는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노령연금 못지않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돌발사고로 가장이 사망할 경우 세대주의 수입원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유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남겨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빈곤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장년층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과 어린 부양유가족을 포함한 적지 않은 인원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 생활환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젊고 소득수준이 낮아 저축의 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시에 유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기업연금제도나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못한 현 여건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보장이 어려워져 따라서 공적인 방법에 의한 사회보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1973년 12월에 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실시를 보지 못한채 보유하고 있는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에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 학교교직원들에게 이미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반근로자들에게만 연금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

회보장제도상의 큰 미비일 뿐 아니라 사회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70여개국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123개국에서 현재 사회보장연금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0\$의 소득수준과 신생공업국을 자랑하는 한국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책면에서의 우리나라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이 모여지는 가운데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건의 국가발전의 중요한 한 부문이며 보건향상은 모든 개발부문과 조화있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서 보건지회는 여타부문과 유리되어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며, 국민의 전반적 복지증진을 지향하는 폭넓은 사회·경제개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보건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농촌주민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의 확대문제이며 예방의료와 1차보건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197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과 의료보험제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건사회부가 농촌의 의료취약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우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은 간호원 조산원들로 하여금 일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의사가 없는 주의촌에서 1차적인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또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간호원이나 또는 기타 보건의료요원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의사만이 맡아서 해야한다면 이는 막대한 국가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주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의사인력만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보건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고 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보건의료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의 1차 보건의료를 위하여 비의사요원들을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값비싼 인력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또 예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보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간호원, 조산원,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및 기타 요원 등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원의 기능과 상호간의 보조적

역할을 제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는 보조직종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80년대의 복지사회 구현이란 관점에서 볼 때 간호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병과 건강문제 만을 보살피는 간호원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과 친절이 배마른 이 사회에서 인간을 간호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지켜 나감으로써 인정이 넘쳐 흐르는 복지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선구자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내일의 복지사회, 더 나아가서는 복지국가를 기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복지사회와 간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도 자못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총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

